

야권대통합 '반쪽 통합' 되나

진보정당 빠진 '중 통합' 무게중심

진보측 소통합 급물살... 민주당은 선거 연대

대통합 연석회의도 '준비모임'으로 격하

민주·'혁신' 선통합 후 단계적 추진 할 듯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인 새진보 통합연대 등 진보 정당들의 소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대통합은 '반쪽 통합'에 머물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13일로 예정됐던 '대통합 추진 연석회의'도 20일로 미뤄진데다 민주당 내부의 반발도 여전히 '반쪽 통합'에도 상당한 진전이 예상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노당, 참여당, 통합연대는 지난 주말 통합 실무협상을 통해 대다수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합의 사항으로는 각 진영 1인씩 3명의 공동대표 체제를 꾸리

되 필요에 따라 1~2인의 공동대표를 추가하고, 과도기 대의기구를 민노당 55%, 참여당 30%, 통합연대 15% 비율로 구성하기로 했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공모방식을 거쳐 3개의 복수안을 마련한 뒤 당원 전수조사와 여론조사를 벌인 뒤 결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실무협의 결과에 대해 민노당과 참여당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각각 추진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새진보 통합연대가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통합연대는 총선 지역구 공천 때 세력간 후보조정 안된 지역에 대해 경선 대신 대표단 결정으로 후보

를 정하고, 사실상 전략공천인 비례대표 개방형 명부의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자는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다.

진보 정당들은 협상이 타결되면 다음 달 통합정당을 출범시킨 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진보 정당들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해온 대통합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13일 열리기로 했던 '대통합 추진 연석회의'가 '대통합 추진 연석회의의 준비 모임'으로 격하됐다. 민주당에서는 오는 20일 전에 '대통합 추진 연석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진보정당들은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이 제안한 대통합 추진 연석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노총에서도 대통합 참여를 놓고 조합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당권주자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에서 "야권대통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견수렴 없이 당헌당규를 무시한 채 속전속결로 사실상 소통합만 이뤄진다면 야권 분열의 불씨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원외 지역위원장 31명은 성명을 내고 통합정당 당론 확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며 이훈평 전 의원 등 고문단도 지도부 총사퇴와 민주당 전대 개최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에서는 진보정당을 제외한 진영과 먼저 통합을 이룬 뒤, 진보 정당과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전망이다. 민주당이 12월17일 통합 전담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27일까지 통합 협상이 마무리될 것인지도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의원 선거구 여수 등 5곳 통합·8곳 분할"

선거구획정위 제시... 지역구 의원들 반발 거세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천기홍 전 대한변협 회장)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8곳의 선거구를 분할하고, 5곳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분구 대상 지역주민과 소속 국회의원의 반발이 거세고 이번 획정안은 권고안 수준이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최종 획정안을 마련하는 동안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획정안에 따르면 분구 대상은 경기 수지와 경기 기흥, 경기 파주, 경기 수원 권선구, 경기 여주·이천, 강원 원주, 충남 천안을 들이

며, 부산 해운대·기장갑 지역을 해운대갑·을로 나누는 대신 해운대·기장을 기장군 선거구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지역구를 분할할 때에는 광역시·도의원 지역구 기준을 존중하도록 했다. 다만, 경기 기흥과 경기 파주, 강원 원주의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분할할 경우 인구 편차가 커 다음 회의에서 형평을 맞추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합구 대상은 여수 갑·을, 서울 성동 갑·을, 부산 남구 갑·을이고, 대구 달서구 갑·을·병은 갑·을로, 서울 노원 갑·을·병은 갑·을로 합치

도록 했다. 분구와 합구를 감안하면 지역구가 3곳이 늘어나게 되지만, 선거구 획정위는 비례대표 3명을 줄이는 방안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인구 상한선 31만406명, 하한선 10만3460명을 기준으로 이 같은 내용의 획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의 경우 인구 하한선 미만이고, 내년 4월 총선시까지 출함이 되지 않아 이번 논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통합 대상 지역구 의원들은 13일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른 일시적인 인구 유출입을 고려하

지 않은 채 선불리 방안을 내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계특위의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정훈(부산남구갑) 의원은 "18대 총선에서도 획정위의 합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획정위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여러 가지 더 감안해야 한다"며 획정위 의견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은 "여수 갑·을을 인구가 29만3000명으로 30만명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합치려는 근거는 어떤 법에도 없다"라며 "인구 수와 관련 없이 행정구를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구가 정해지는 것도 문제"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18 교과서 삭제에 분노하는 광주

광주시와 시의회, 광주시교육청, 5·18 관련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80여 개 단체는 13일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새 역사교과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 철회를 위한 광주지역 유관기관·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삭제철회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 제곡>

"5·18 삭제는 역사 왜곡·민주화 모독"

민주 지도부, MB정권 성토... 교과부 장관 해임 추진

민주당은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 등을 제외한 것에 대해 "역사 왜곡이자 민주화운

동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승만·박정희 독재,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이 정부에 이 안용이 너무 많다. 주권 팔아넘기기에 이어 역사 팔아넘기기에 나섰다"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

다"고 말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최근의 집필기준은 왜곡 수준이 아니라 조작 수준"이라며 "학문의 자유를 짓누르고 교육을 보수정권 재창출이라는 정치 목적으로 쓰는 정권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 최악의 자살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차라리 역사교과서를 모아 현대판 '분서갱유'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했고, 박주선 최고위원은 "아이들의 교과서가 MB 자서전이 아니다"며 이주호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5·18 민주화 운동 교과서 반영할 것"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 밝혀

최근 발표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과거 정권의 독재와 민주화 관련 내용,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교과서 검정심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정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집필기준의 '4·19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 변동과 민주화운동 등',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라는 부분에서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서술하도록 제시했다"며 "검정기준을 만들 때 적절한 표현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5·18민주화운동 등이 교과서에서 빠지면 검정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와 국편은 내년 1월 검정심사 기준을 만들 예정이며 14일 서울교대에서 국어·경제·역사 교과서 출판사와 집필진을 대상으로 집필기준 설명회를 연다. /연합뉴스



THE RUBENS
진흥 더 루벤스

실입주 1억원
즉시입주가능!

2007년 분양가 그대로! **49형**

놀라셨습니까?

진흥이 싸게 팝니다

사는것만으로도 자부심이 되는 명품아파트! **금호 진흥 더 루벤스**

발코니 확장 비용 무상 | 천정 매립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2011년 12월 31일부로 **취득세 75% 감면혜택 종료!**

THE RUBENS **진흥 더 루벤스** **금호동 진흥 더 루벤스**

분양문의 **062) 352-9595**

• 분양세대: 총 49py 330세대 • 시행사 **VISION** (주)에스엔에스비전 • 시공사 **흥업** (주)흥업건설(주)

1등	1명	백화점상품권	100만원
2등	1명	"	50만원
3등	5명	"	10만원

주말 분양사무실 방문 고객께 사은품 증정